

No. 25

IIRI Online Series

북·중관계에서 오는 한국의 안보 도전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2016.01

북·중관계에서 오는 한국의 안보 도전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I. 문제제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중견국 외교’,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구상과 비전을 국내외에 제시하며 외교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한국 외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때 미·중 모두로부터 구애를 받던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과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이슈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兩)강대국의 국익에 따라 도리어 압박을 받고 결정을 미루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비전과는 다르게 대일관계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차이에 발이 묶여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또한 목표와는 다르게 남북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러한 한국 외교에 관한 우려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 지대에서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8월 20일에는 북한이 한국의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포격을 하였다. 북측은 준전시상태까지 선포하며 긴장을 높였으나 결국 극적인 대화 국면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아 나갔다. 8월 22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 남북 고위 당국자 협상은 6개항에 합의하고 25일 새벽 2시에 이를 발표했다.¹⁾ 이를 통해 9월 7-8일 사이에 남북 적십자사 실무접촉이 진행되었고,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10월 20-26일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 간의 새로운 대화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가 나타난 시기에 한국 정부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향후

1) 8·25 합의문의 6개항은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사실무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임을 미국에 설득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의 조율 후 9월 2-4일 사이 중국을 방문하여 열병식을 포함한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6번째 한·중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한국은 중국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 표명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진전된 한·중 공조와 함께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기여와 한·일관계의 전환점도 마련하였다.

물론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이후에도 ‘중국역할론’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며 남북 간의 대화 국면과 한·중 간의 대북공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하지만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의 기류는 대화국면으로 접어들며 지역 관련국들 사이의 긴장을 낮추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한국의 외교적 역할의 공간을 넓히는 한편, 향후 다가올 안보도전 요인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방안을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의 흐름 하에서 이 글은 동북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양자 간, 다자 간의 관계 변화 가능성 중에서 북·중관계 변화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 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북·중관계 차원의 안보 도전

1. 중국의 외교원칙과 전략

중국은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국가 최고 목표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평화공존 5원칙’, ‘비동맹 원칙’, ‘독립 자주의 평화외교’ 등 기존의 외교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가 외교 전략으로는 근본적으로 덩샤오핑 이후 이어져 온 ‘도광양회’ 전략을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한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물론 덩 시대의 ‘도광양회’와 시진핑 시대의 ‘도광양회’ 전략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덩의 ‘도광양회’는 중국을 현대화하여 중국 인민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은 물론 서구 강대국들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인내하며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며 국력을 증대시키는

모습이었다. 반면 시의 ‘도광양회’는 대미(對美) 관계에서 미·중 간 세력전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발전 중심의 외교에서 ‘적극적인 외교’와 ‘강한 군대’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양강(兩強)구도 중심의 외교로 점진적,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교 전략적 기조아래 시진핑 지도부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가리키는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중심으로 1) 대국외교, 2) 주변외교, 3) 개도국 외교, 4) 다자회의 외교 등을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가 나타나야 할 주요 분야로 지목했다. 특히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국외교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운명 공동체(命運共同體)’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외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개도국 외교는 경제력과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회의와 국제 다자기구를 통한 다자외교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실행으로는 경제력을 중심으로 지역포괄적경제협정(RCEP),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통해 동아시아의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그리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개발은행(NDB)과 위기대응기금(CRA) 등의 국제개발 금융 기구들을 설립했다. 군사안보적으로는 2014년 5월 제4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아시아 신안보관’을 발표하였으며, 이외에도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등이 있다.

중국은 다자외교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이 회의 직전인 11월 08일에는 ‘Dialogue on strengthening connectivity partnership(加强互联互通伙伴关系对话会)’을 역시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미얀마, 타지크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SCO 대표 등 APEC 회의에서 소외된 중국의 주변국들과의 회의를 따로 갖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2. 한반도 정책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 내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견제구도 하에서 평화적인 남북관계와 공존을 위한 균형정책과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개발 과정이 중국의 기준을 넘어서며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한반도 전략의 변화를 불러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북·중관계를 재정립해왔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중/북·중관계보다는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미·중의 전략적 경

쟁구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중의 경쟁구도와 중·일 갈등이 높아지고, 미·일/한·미동맹이 강화된다면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대미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 재정립에 기인한 '남북 균형' 정책을 견지해 간다면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서 양국 간에 심각한 정책적 의견차를 느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하나, 현재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의 경쟁구도를 생각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한반도 비핵화(또는 북한 핵개발 동결에 이은 안정적 관리)가 중국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가 되기 때문이다.

가. 한·중관계의 현주소: 한·중 동맹론 논쟁

동북아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나타나고 미·일동맹이 강화되자 중국은 한국을 미·일 동맹에서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과 더불어 중국 중시 정책이 나타난 것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013년 들어 한·중 동맹론까지 등장한 한·중관계는 2014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에 즈음하여 중국 내에서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왔으나, 이후 서서히 사그라졌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의 논점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1) 양단(兩端)외교(double alliance)

옌쉐통(閻學通) 칭화대 당대국제관계 연구원장은 그의 저서 “역사의 관성(历史的慣性)” (2013)을 통하여 향후 미·중의 양극체제 구도가 나타날 것으로 주장했다. 중국이 이러한 국제사회 구조에서 미국과의 경쟁에 승리하려면 그간 자국이 견지해 온 비동맹 원칙을 버려야 하며, 미·중 경쟁에서 중국의 편이 되어줄 동맹과 우방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과 태국이 비록 미국과의 동맹이나 중국과도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²⁾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1) 일본의 안보위협, 2) 북한 핵문제 그리고 3) 동아시아 평화유지를 한·중 공동의 세 가지 안보이익으로 명명하며 이를 위한 한·중 간의 동맹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한·미동맹의 존재를 지적하며 한·중동맹 체결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고려와 조선이 보여주었던 ‘양단(兩端)외교(double alliance)’ 를 가리키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옌 교수는 2014년 들어 현실성을 감안하여 한국인들이 ‘동맹’이란 용어에 거부감이 있다면

2) 閻學通, 『历史的慣性:未來十年的中國與世界』(北京:中信出版社, 2013), pp. 198-199.

시 주석이 주창한 ‘운명 공동체’ 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동맹론의 강도를 낮추었다.

(2)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주장

2014년 7월 시 주석의 방한 직전 왕이웨이(王義桅) 인민대 국제사무연구소 소장은 중국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측면에서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일이 서로 모순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³⁾ 그는 중국이 한국과 핵포기, 안보, 통일의 삼위일체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中韩睦邻友好合作条约)’을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왕 소장은 또한 중국의 주변을 둘러보면 북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파키스탄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으로는 ‘중국-ASEAN 우호협력조약’을 논의 중에 있는데, 유독 동쪽만 공식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선린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은 장차 자국의 북서·남동의 주변 외교 전략 포석의 완성을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3) 한·중동맹은 동북아 역사의 순리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역사 전문가인 리둔치우(李敦球) 前중국한국사연구회 비서장은 2014년 7월 시 주석의 방한이 끝난 직후 한·중관계는 경제와 인문교류영역에서 이미 ‘동맹관계’에 도달했거나 또는 초과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⁴⁾ 그는 역사상으로 본다면 중국과 한국은 일찍이 우호적인 동맹관계였으며 동북아의 안정을 공동으로 보호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중국이 비동맹 대외원칙을 유지하므로 다른 국가와의 동맹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중국과 한국이 동맹의 의미를 내포한 양자 관계를 갖추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리둔치우는 양국 지도자가 중·한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것은 현재의 역사 발전의 조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4)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중 동맹론

천딩딩(陳定定) 마카오 대학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 동맹론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⁵⁾ 천딩딩은 한·중동맹이 한·미동맹을 대체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에 동의하는 한편, 더 나아가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한국의 경제 발전의 미래는 중국의 거대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점과 만약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필연이라는 생각을 중국도 끌어안는다면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안보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

3) “王义桅：中韩可考虑缔结睦邻友好合作条约,” 『联合早报网』, 2014년 07월 1일.

4) “专家：中韩结盟可能性不大 但不排斥同盟内涵,” 『环球网』, 2014년 7월 5일.

5) Dingding Chen, “Is a China-South Korea Alliance Possible?,” *The Diplomat*, July 08, 2014.

하였다. 또한 그는 현재로서는 중국도 북한을 버릴 수 없고, 한국도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나, 20년 후 미·중관계가 지금과 달라진다면 한·중동맹 체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중국의 대북정책 논쟁

2014년 중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했던 한·중 동맹론은 이후 중국 내에서 논쟁이 사라졌다. 대신 중국 내에서는 뒤이어 ‘기조론(弃朝论)’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기조론은 ‘방기조선(放弃朝鲜)’, 즉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뜻한다. 2014년 말 당시 중국 내 기조론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었다. 하나는 전통적인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념이고, 둘째는 북·중 사이에 많은 모순과 분쟁이 있으며 북한이 중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중국에게 마이너스 자산(负资产)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14년 11월 27일자 중국의 환구시보에 한·중 동맹론을 주장했던 리둔치우(李敦球) 교수가 기조론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세 가지의 반론을 펼쳤는데 첫째, 중국과 북한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므로 국가이익의 불일치와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중일관계는 영토, 역사 인식, 동아시아 국제정세 등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화가 불가능하나, 북·중관계는 지정학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관계라고 보았다. 셋째,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은 지정학적으로 근본적인 이익이 일치하며 이는 동북아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자 12월 1일 前남경군구 부사령관 왕홍광(王洪光)이 리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을 환구시보에 기고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는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 점에서 리 교수가 주장하는 지정학에 근거한 북·중 간의 근본적인 이익의 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이 그간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에서 중국과 의논하지도, 중국의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북한의 도발들이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왕은 끝으로 중국의 대북관계는 국가이익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중국은 북한을 끌어들이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⁶⁾

바로 다음날 차오시공(曹世功)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연구원이 이번에는 왕의 주장과 기조론을 모두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중국 언론에 실었다. 그는 기조론은 결국 중국의 국가이익을 해칠 것이라 보았다. 북핵 문제에서도 이는 분명히 지역의 평화를 깨는 문제이지만 만

6) 王洪光, “中国不存在“放弃朝鲜”的问题,” 『人民网-环球时报』, 2014년 12월 1일.

약 핵문제로 북한을 포기한다면 이는 북한 비핵화 차원에서도 감정적인 대응이고 전략적 사고의 결핍이라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는 오늘날 국제정세에서 지정학적 개념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며 아시아 회귀정책을 채택했는지 반문하였다. 결국 북·중이 갈라서면 양측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⁷⁾

이외에도 한반도 전문가인 장롄구이(张琏瑰) 중앙당교 교수는 왕홍광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며 만약 남북한이 충돌하면 중국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찬룡(金灿荣) 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국익과 지역의 평화를 보호할 것이며 누가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행위를 반대할 것이지만 그 국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아오 포럼에서 나온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며 ‘기조’와 북한을 끌어안는 ‘옹조(拥朝)’ 모두의 과장된 접근을 경계하였다.⁸⁾

2014년 말에 돌아올랐던 중국 내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의 본질은 한국에게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었다. 첫째, 2014년 시 주석의 한국 방문 전후로 가열되었던 한·중 동맹론이 이후 급격히 사그라진 것과 뒤이어 기조/옹조론의 논쟁을 불러온 것은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떼어내 중국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쟁이었다. 즉, 중국은 한국과 한·미동맹에 관하여 냉철한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둘째, 따라서 이들 논쟁의 핵심은 새로운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동북아 정세 하에서 어떤 대북정책이 중국의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가였다. 셋째, 이러한 논쟁들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정세변화 가능성에 따른 세밀한 대북전략의 개발로 점차 진화해 나타나고 있었다. 즉,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동북아 정세 특히 역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이 기조론과 옹조론 사이를 오가며 많은 가능성을 논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희망적 사고에 기인하여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의 냉각을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III. 북·중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한국에 대한 도전 요인

1.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의 북·중관계 개선과 한반도 균형정책

7) “曹世功：视朝鲜为“白眼狼”者缺大局观,” 『环球时报』, 2014년 12월 2일.

8) “金灿荣：习近平讲话暗示中国对朝鲜半岛政策,” 『凤凰卫视』, 2014년 12월 28일.

중국 공산당의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2015년 10월 9-12일 사이 북한의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로 인해 북·중관계는 일단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었다. 최근 북·중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며, ‘혈맹’에서 ‘정상국가’ 관계로 재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중 간의 당대당(黨對黨) 교류는 여전히 양국을 연결하는 전통적인 채널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북·중관계 개선의 커다란 걸림돌로 남아있다. 실제로 양자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이미 수면 하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2014년 12월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류윈산은 김정일 사망 3주기 주중북한대사관 추도회에 참석하였다. 시진핑 주석도 2015년 7월 16-18일 사이 중국 동북 지역에 위치한 지린성(吉林省) 일대를 방문하였다. 이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동북3성 지역민들을 위로한다는 위기도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과 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⁹⁾

사실 중국의 최고 지도부라 할 수 있는 7명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보통 일 년 동안 지역을 나누어 약 20군데 이상의 지방 순회를 하고 있으며, 이번 시 주석의 지린성 방문도 이러한 지방 순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같은 달 27-28일 사이 랴오닝성(遼寧省)의 성도 선양(沈陽)시를 방문하며 9일 만에 다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북 지역을 연속 방문한 점은 북한에 대한 정치·외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¹⁰⁾ 이와 더불어 시 주석의 연이은 동북3성 방문은 시드니 사일러 당시 미국 무부 북핵 특사가 2015년 7월 26일부터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방문하며 북핵관련 주요 인사들과 회동한 것과 더불어 북한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과 회유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이어진 자국의 고위직 외교 관리들의 발언 릴레이를 통해 명확한 거부 의사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7월 21일 “북한은 이란과는 달리 핵보유국”임을 주장하였다. 이어 7월 28일에는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대규모의 성대한 기념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언하였다. 같은

9) 2014년 동북3성의 경제 성장률은 랴오닝성 5.8%, 지린성 6.5%, 헤이룽장(黑龍江)성 5.6% 등 다른 성과 비교하여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연변 방문 약속지킨 시진핑, 북·중·러 ‘동북진흥’ 시동거나,” 『연합뉴스』, 2015년 7월 17일.

10) 물론 시 주석의 연이은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방문은 국내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경제적 의미이다.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은 창지투 계획을 중심으로 한 ‘동북진흥’ 계획, 북중 경험은 물론 북·중·러 경험의 활성화를 통한 중국 동북 지역의 경제개발 독려의 의미가 있었다. 둘째로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로서의 시 주석의 정치적 이미지 강화의 의미가 있다. 시 주석은 올해 3월 12기 전국인대에서 리징하오(李景浩) 조선자치주 주장을 포함한 자치주 대표단과 만나 지린성 방문 시 반드시 연변을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었다. 셋째로 동북 지역에 위치한 선양군구(沈陽軍區)를 위무할 필요가 있었다. 선양군구는 2014년 부패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올해 3월 방광암으로 사망한 前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쉬차이허우(徐才厚)의 정치적 텃밭이었다. 취임 후 반부패 정책을 몰아치며 당정 고위 관료에 이어 군 지도부의 부정부패에도 손을 댄 시 주석으로서의 쉬 前부주석이 대학 졸업 후 68년부터 92년까지 근무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행사한 선양군구를 위무할 필요가 있었다.

날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며 일방적인 핵포기를 논의하는 대화는 거부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7월 29일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위성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였다.¹¹⁾ 같은 날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임과 일방적인 핵포기를 논의하는 협상에는 흥미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8월에 들어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북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리동일 前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8월 6일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등 한반도 정세의 악화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인공위성은 주권사항”이라 답변하였다.¹²⁾

이렇듯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북핵 문제의 제의를 전제로 양국 관계 개선의 사인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지난 7월 25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전국노병대회 축하연설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인민지원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경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정은은 다음날인 27일에 평안남도 회창군에 위치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정전협정 62주년을 기념하며 화환을 보낸 것으로 보도되었다.¹³⁾ 중국의 신화통신을 포함한 언론매체들은 김정은이 화환을 보낸 것을 보도하며 이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정은의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단순한 기념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국 지도부와 중국 인민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⁴⁾ 이러한 모습들은 또한 중국 측의 대북관계 개선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중국과 북한이 양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 들어선다면 그간 3차 핵실험 후 북·중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희망적 사고에 익숙한 한국으로서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지키려는 핵무기를 인정하 가운데 양국 관계개선과 위험관리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국은 다시금 남북한 균형정책을 가다듬고,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럴 경우 향후 한·중간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에서 심각한 수준의 이견이 표출될 우려가 있다.

11)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 “위성 권리 있다” …로켓 발사 시사,” 『연합뉴스』, 2015년 7월 30일.

12) ““영어로 질문해라” …ARF 찾은 北 거침없는 공세적 여론전,” 『연합뉴스』, 2015년 8월 6일.

13) “북한 김정은, 중국에 잇단 화해 손짓…중공군 묘에 화환,” 『연합뉴스』, 2015년 7월 28일.

14) “金正恩出席朝鲜第四次老兵大会并致辞,” 新华网, 2015년 7월 26일; “金正恩向志愿军烈士陵园送花圈,” 『凤凰网财经』, 2015년 7월 29일; 『연합뉴스』, 2015년 7월 28일.

2. 북·중관계 개선에 이은 중·일관계 개선

중국은 현재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에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2015년 6월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본이 남중국해에 대한 개입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분개를 표시하며” 항의의 뜻을 이미 수차례 전달했다고 언급하였다.¹⁵⁾

하지만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의 중·일 정상 간의 만남 이후 양자 간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은 2015년 7월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인 포로와 중국인 강제노동자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한국인 강제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머티리얼의 오카모토 사외이사는 미국인 포로와 중국인 강제노동자는 기본적으로 ‘포로’로서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으나, 이들은 일본인과 함께 일했던 한국인 노동자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¹⁶⁾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한·일 사이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과 한국인의 강제 노동에 대한 시각차에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2차 대전 당시 강제 노동자에 대한 사과에서 한국과 중국을 다르게 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역사인식 문제에서 한·중을 따로 떨어뜨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일본의 전술로도 해석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아베 총리의 8·14 담화에도 일본 측에서 본다면 중국 측을 배려하는 문구(침략, 반성)는 모두 포함되었다. 물론 2015년 11월 1일에 서울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여전히 역사인식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로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하지만 만약 미·중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의 구도로 변화하고, 중국이 북한과 함께 일본과도 관계 개선(주변외교에 기반을 둔)을 이룬다면 한국 외교가 동북아 외교에서의 역할이 현격히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한국이 갖는 두 가지의 외교 전략적 문제점을 아직 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반사이익’ 또는 ‘몸값 높이기’를 할 수 있었던 외교적 위치와 이점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 “2015년 6월 12일 外交部发言人洪磊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www.fmprc.gov.cn/mfa_chn/fyrbt_602243/jzhsl_602247/t1272718.shtml.

16) “[단독]미쓰비시머티리얼, 日정부에 보고한 후 美포로에 사죄했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6일; “[단독]미쓰비시머티리얼 사외이사 “징용은 잘못…포로문제와는 달라”, 『연합뉴스』, 2015년 8월 6일.

3. 동북아시아 민족주의 발호에 따른 한·중관계 동요

최근 대만에서는 양안 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과 대만인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⁷⁾ 만약 이러한 반감이 확대되어 양안관계 갈등고조와 미국의 개입이 나타난다면 대만에서는 ‘독립’과 ‘민족의 정체성’ 문제가 빠르게 부상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논쟁이 확산된다면 한반도 내에서도 한·중 사이의 민족주의와 역사 문제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동북공정’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다면 한·중 간의 역사적 갈등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주민들의 여론 제어가 용이한 북한이 중국과의 역사 갈등 문제를 내부적으로 제어하고 한·중 간 묵시적인 중립의 위치를 잡는다면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일본 모두와 역사적 갈등이 존재하는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4. 미국의 장기적인 ‘상대적 쇠퇴’와 북·중관계의 강화

현재의 추세대로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가 계속된다면 미·일동맹 대(vs.) 북·중(또는 북·중·러)의 구도 하에서 한국이 선택의 압력을 받거나 외교·안보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가 계속 된다면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서구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가치관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개도국과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식 발전모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는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과 마주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중국식 정치·경제 제도의 부분적 도입 시도한다면 북·중관계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경제 부분에서도 미국이 확립한 기존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위안화 국제화와 AIIB, ADB, CRA 등을 통한)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현재의 국제무역 규범과 기준에 대한 중국식 대안과 개혁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미 미국의 정치·경제적 가치와 제도에 익숙한 한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퇴조가 나타나고 북한이 중국이 내세우는 발전 모델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북·중관계가 강화된다면 한국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의 주도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17)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Arthur S. Ding, “From Three Small Links to Three Direct Links: Current Status of the Cross-Strait Exchange and Cooperation,” a presented paper at the conference on *A New Way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Beyond German Model and Cross-Strait Model* 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Republic of Korea, April 14, 2015.

5. 중국의 경제 경착륙과 북·중관계 악화

미래 중국의 경제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하지만 만약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한국이 겪을 경제적 충격은 물론 북한도 중국으로부터의 원조가 현격한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나타나며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해 질 수 있다. 병진정책의 견지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개혁(또는 개선)·개방정책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투자 가능성이 낮은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비정상적인 의존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의 경제적 경착륙은 북한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받기위한 새로운 무력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를 유지하는 한편,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과 역내에서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을 강화하게 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6. 동북아시아 핵안전 사고 발생에 따른 한·중/북·중관계의 혼란

근래에 중국은 공기 오염의 주범인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 발전소를 대신하여 현재 31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이미 건설된 기존의 17기의 원전과 함께 중국은 이미 원자력 에너지의 강국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아직 중국의 핵안전 기술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원전의 다수가 중국의 동부 연안에 자리하고 있어 중국 원전의 안전사고에 관해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 또한 영변에 존재하는 오래된 5MW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여 왔다. 특히 영변 지역의 핵안전 사고 발생 시 북·중관계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7. 북·중 및 남북 간 교류 증가에 따른 보건 피해

향후 북·중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북·중 간과 남북 간의 무역과 인적 교류가 늘어난다면 북한의 감염성 질환(한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장티푸스 등)에 대한 남한 주민, 특히 청소년 계층을 비롯한 면역력이 낮은 한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보건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는 역으로 영양 결핍의 북한 주민, 특히 소아들에 대한 남한의 새로운 병원균 감염확산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IV. 한국의 대응 방향

1. 북·중관계 개선과 한반도 균형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중국이 자국의 국익에 대한 손해와 심각한 한반도의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의 통일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도와준다는 것은 지양해야 할 ‘희망적 사고’이다. 한국은 중국의 진정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통일 후 러시아를 포함한 3각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경제 번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이 예상하는 시각처럼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크고 작은 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충격이며 향후 안정된 한반도는 중국과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중국에 강조하며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모순이 계속 쌓여 왔음을 지적하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함께 대비해야 함을 중국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간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들의 논의를 피해왔던 중국이 한국과 한반도 통일에 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비록 이것이 제멋대로인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든, 또는 중국의 판단으로는 아직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통일 논의의 문을 열은 이 시기를 중국의 한반도 균형 전략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결국 자국이 부상하는 동안 한반도의 상태를 균형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중국을 향해 한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지적하며 향후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북한 내부의 혼란에 대비해 한·중 간의 전략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미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한·미·중 전략대화가 필수적임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병진정책을 고집한다면 중국의 남북한 균형정책은 북한의 다가올 내부혼란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한 핵의 동결과 안정적 관리를 전략적으로 검토해보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중국에 제시하고 중국의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약속을 어길 경우 중국은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진정성 있게 협력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15년에 연이어 열린 9·2 한·중 정상회담, 9·25 미·중 정상회담, 10·16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11·1 한·일·중 3국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한·미·중·일의 단호하고 분명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2. 중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대응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근본적인 불신과 국내정치적 상황, 그리고 지역 내 패권구도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중일관계의 개선 움직임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본다면 중일 간의 관계개선은 자국의 국력부상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강대국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위기를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특히 소수민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당체제 하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은 앞으로도 공산당 리더십의 정통성과 소수민족과의 화합을 위해 지속적인 애국·민족주의의 유지가 필요하며 일본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또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보수우익 그룹이 이끄는 일본은 한·중관계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신뢰를 쌓기가 어려운 근대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정치 내에서 보수우익 그룹을 대체할 정치 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보수우익 리더십을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일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당분간 나타나기 어려운 구도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안보동맹과 균형을 이룰 ‘경제적 운명공동체’로서의 한·중관계를 강화하여 미·중 사이에서의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과 위치를 잡아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한·미·중, 한·중·일, 한·미·일 등 소다자 회의를 활발히 진행하며 동북아 지역의 미·중 구조에서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미국은 물론 중국에 이해시켜야 한다.

3. 동북아시아 민족주의 발호에 대한 대응

동북아 지역에서 민족주의의 발호가 나타난다면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과 남북한 화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동북공정’ 문제와 더불어 일본과 과도한 민족감정적인 대립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교 전략적인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 점진적으로 한·대만 관계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하며,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역사와 안보, 경제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탈연계(de-link) 정책’의 수립과 이에 대한 선제적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과 한민족이 세운 고대 국가들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과의 역사 논쟁에는 남북학자가 힘겨 함께 참석하여 역사적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모습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역사인식 차이에서도 중국과 역사적인 인식의 공감대는 유지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특히 전시 하의 어린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다가가는 한국과 애국·민족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중국과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 내의 양심주의자들과 반전·평화주의자들의 담론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4. 미국의 장기적인 쇠퇴와 북·중관계의 강화에 대한 대응

현재의 미·중관계를 고려한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인도양-서태평양에서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시장경제 체제, 민주주의, 인권에 관한 의미, 그리고 전후 미국이 확립한 국제사회의 경제, 무역, 금융 질서를 지지하고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미·중 역학구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정학적 구조의 미국과 지정학적 구조의 중국이 주도하는 두 개의 역내 리더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이원(二元)외교의 확립이 필요하다.¹⁸⁾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닌 한국의 국가 목표와 이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외교 전략의 수립과 정책적 우선순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내 미국의 퇴조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를 피하기 위해 앞서 지적한 중국의 한반도 남북 균형정책에 변화를 유도하고 한·미·중의 협력구도를 이룩해야 한다.

5.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이 나타나더라도 북·중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고 북한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하게 존재하는 시기에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와 개방정책이 진전되도록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18) 김한권, “미·중 사이 한국의 이원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5-2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년 8월 26일).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이 철광석과 석탄 등의 에너지 원자재 품목에서 의류 등의 노동집약적 생산품목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시기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제한적인 인력과 지역에 국한되던 북한의 대중 수출 구조가 숙련되고 임금이 낮은 북한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며 개방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3성과 북한과의 무역에 한국이 가세하는 남·북·중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는 남·북·중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김정은 체제는 북·중 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무역과 북한 내 시장체계를 통한 통치 자금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이 더딘 동북3성 지역의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물론 동북3성에서의 남·북·중 경협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북한 경제체계의 변화를 유도하여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파급에 가능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주변 국가들과의 경협을 통해 더욱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특히 남·북·중과 남·북·러 경협의 활성화가 동북아 신냉전 구도의 도래를 막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의 미국 리더십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6. 동북아시아 핵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한·중·일 간에는 원전안전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시스템의 시급한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한·중·일 원자력 안전 최고규제자회의(TRM)의 역할 강화와 중국의 적극적 협력 권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핵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실제로 한·중·일은 TRM을 통해 원전 사고 시 정보를 알려줄 것 등을 3국이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전에 정보를 얻거나 실질적인 협력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일 간의 핵안전 메커니즘의 확립과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안전 메커니즘에 포함시키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2015년 10월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및 제3차 TRM+ 회의(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에서 이러한 논의에 진전을 보인 점과 이어 11월 1일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통해 민간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모습이다.

7. 북·중 간/남북 간 교류 증가에 따른 보건 피해에 관한 대응

남북 간의 의료·보건 교류 강화와 시급한 대북 이원화 정책의 검토 필요하다. 특히 인도주

의적인 의료·보건의 대북 원조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한다. 그간의 경험으로 의료·보건 부분에서의 약품지원의 갑작스런 중단은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켜 왔으므로 한국 정부는 대북(對北)정책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압박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접근의 대북 이원화 정책의 조속한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다자적인 접근의 의료, 보건, 식량의 원조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 의료와 식량 원조물자의 배급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와 비정부기구(NGO)의 강한 압박은 물론 유엔의 공식적인 대북한 설득 작업 또한 필요하다.

V. 결론

중국의 부상과 함께 변화해 온 미·중관계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온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국제관계는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 변화의 방향성도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안보목표와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양자 관계의 변화는 향후 한국으로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며 미·중 사이에 존재하는 대북정책에 관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줄여나가는 전략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정학적 리더십과 중국이 주도하는 지정학적 리더십에 각각 대응하는 한국 이원외교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외교적 기반아래에서 한국은 향후 북·중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북·중/중·일 관계 개선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고립, 역내 민족주의의 요인들의 부상, 미국의 장기적인 상대적 쇠퇴 가능성, 원자력 시설의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안보 위협요인들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하며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구축,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향후 미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과 일본, 러시아와 몽골, 그리고 대만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열린 외교의 모습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을 이해관계 별로 묶는 다양한 소다자 회의의 구성에 한국이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하다.

/끝/